

제349회 국회  
(임시회)

##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국회사무처

2017년2월3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1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9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우면서도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로 보낸 죄스러움과 그 이후 벌어진 국가적 혼란과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감당해야 될 수많은 위기들 때문입니다.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이 한겨울 엄동설한에 장사가 안 되고 취직이 안 돼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저희들이 좀 더 잘하지 못하고, 좀 더 살피지 못한 죄, 여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 숙여 사과)

지금 정치권은 온통 조기 대선 열기에 들떠 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 권력을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외교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정치권이 오로지 길거리에 나가 표이삭만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대고 이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이때에 오로지 권력부터 잡고 보자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터널 속에 있더라도 저 끝에는 밝은 빛이 쏟아지는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라 믿고 묵묵히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국 이후 70년이 다 되어 가는 긴 세월 동안 온갖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루어 낸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더욱 갖습니다. 그것이 여당인 저희 새누리당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주축인 진정한 보수 세력

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야 어디로 가든 말든, 민생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당장의 표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책임은 결국 우리 집권 여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간의 많은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사죄해 왔습니다. 그 간절하고도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늘 야당에게 이제는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는 소수 야당이 아니라 국회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다수세력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이제 비록 제2당이지만 여전히 집권당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약의 길로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노력을 유심히 보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못하면 더욱 아픈 회초리를 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리 싸움만 하는 국회와 정치라고 하더라도 정말 힘을 합쳐야 할 때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어느 정파나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서는 더욱 그러한 단일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는 저 또한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미증유의 일입니다. ‘이러다라도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요행심리에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한 도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분야는 대외 분야, 즉 외교안보적 불안입니다. 세계는 지금 신열강전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질서는 미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자기 생존부터 도모하고 보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북아는 그 열강전의 중심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로 국가 최고리더십이 사실상 부재인 가운데 일찍이 100여 년 전 구한말 시대에도 보았던 열강의 각축전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에

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정책, 중국의 무서운 확장과 주변국 군사 주권에 대한 개입, 일본의 뻔뻔스러운 영토 야심과 역사 왜곡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관계를 틈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 우리가 맞고 있는 외교적 신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이 벌이는 핵무기 불장난은 언제 어떻게 이 한반도를 재앙 속으로 빠뜨릴지 모를 정도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한 테러와 전쟁 위협이나 마찬가지로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 쏘아 올릴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제재와 경고를 해 온 국제사회가, 특히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안보적 급변 상황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고립을 자처하며 나라 빗장을 잠그고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국가 경제의 절대적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마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국가 방위를 넘어서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연결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요동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이미 시작된 미국의 동맹 재편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략적이고도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막을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며, 한미 동맹의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외교안보적 현안들을 정부에만 맡겨 놓고 우리는 대선 판에만 관심을 갖기에는 대단

히 심각하고 힘든 과제들입니다. 신열강전 시대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가 모두 연결된 융합적 국제질서라는 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이런 복합적인 위기에 대해서만은 여와 야라는 도식적 대결을 넘어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놓고 야당이 어디 있고 여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여러 차례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나서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각 당의 지도자들이 대선 준비에 바쁘다면 여야 각 당에서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뽑아 초당적 정책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연구체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 초당적 정책 컨소시엄에서는 특히 외교, 안보, 국제경제 등 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현안 과제를 놓고 초당적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브레인파와 경험자들의 자문도 받아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길을 거국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한 이 저성장의 장기화는 누구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넣어 꾸린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과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이라는 가공할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13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주택대출에 대한 집중이 과도해서 부동산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때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자칫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해 이 국가적 경제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국회가 정부 탓만 하고 대선 게임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

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도 국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국회 리더십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할 때입니다.

국가 안팎의 위기가 이처럼 퍼펙트 스톰처럼 밀려오면 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될 책무는 바로 우리 정치, 즉 국회와 정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하는 영역, 곧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세력만 바뀌는 정권 교체로 이처럼 당면한 국가적 위기들이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낡은 제도와 의식은 그대로 둔 채 구호만의 정치 교체로 국민의 원성을 넘어 지탄을 받는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의식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체도를 그대로 답습한 채 의식조차 구정치의 습성에 그대로 젖어 있으면서 권력을 잡은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하지도 않던 일들을 이제 와서 개혁이니 혁명이라는 말로 새 상표를 붙여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하겠다고 말하는 것부터 모순입니다. 과거에 엄청났던 정권 주변의 부패와 무능의 기억들마저 국민들이 벌써 다 잊어버린 것처럼 덮는 것도 위선입니다.

이 모든 위기를 오로지 남의 탓, 언론과 검찰 탓, 재벌 탓으로 돌린다면 정부와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국민이 그 비싼 세금을 들여 온 야당은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정치를 외치고 말로는 국민대통합을 역설하면서 정작 당 안에서는 패권을 누리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청소 대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놀라운 편가르기식 발상 자체가 정말 청산되어야 할 구정치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과 형태의 변화 없이 누가 정권을 잡든 그것은 권력의 탐욕일 뿐인 것입니다. 정치인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의식부터 변해야 합니다. 대의제 민주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광장의 군중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최고기관인 국회와 정당이 대중의 눈치만을 살피며 그를 따라 다녀서야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가적 난제와 위기를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대선 준비와 탄핵 심판의 와중이라 하

더라도 이번 2월 국회부터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라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받는 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 드리기 위해 우리 국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지금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탄생의 치열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정책을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키고 당헌과 정강정책, 당명까지도 우리 당의 혁신에 걸맞게 바꿔 나가는 중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비겁하게 여당의 자리를 부인하거나 그 위치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 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깃발을 붙들고서 그 깃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 다.

저희들은 새누리당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가꿔 온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가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보수 가치를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보수가 이렇게 왜곡되고 폄하되기까지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마저 진짜 보수라고 자처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이기가 막히는 이념 혼란의 시대에 우리 새누리당만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당당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정의 어려움은 새누리당의 부족함일 뿐 결코 보수의 실패는 아닙니다. 보수 정당을 이끌던 우리의 잘못이지 보수 정권을 지지해 준 국민이나 보수 가치를 함께해 온 당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보수란 자유이고, 책임이고, 공동체 정신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그 어떤 가치보다 중시하지만 나라가 위기일 때 앞장서서 헌신하고 책임지는 것이 보수의 행동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회의 약자를 먼저 돌보고 배려하면서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원래 보수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은 금수저 출신들이 서민 보수를 자처하고, 부모의 배경으로 군대를 빠진 사람들이 안보 보수를 외치는 것은 보수를 참칭하는 사이비 보수일 뿐입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배가 난파되어 갈 때 승객과 배를 두고 먼저 뛰어내려 도망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수주의 정치인이라

면 이념과 철학을 붙잡아야지 일시적 인기와 권력을 쫓아 이리저리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회주의적 정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도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 스스로 자신이 따르던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쫓아 몰려다니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영국의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 때로는 노동당의 핵심적 정책조차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변신해 왔습니다. 진정한 보수정치는 것처럼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전통적 질서를 소중히 하면서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 법치주의, 준법, 책임, 권력분립, 배려, 공정 등 보수 본래의 덕목을 숭선수범하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보수 정당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수 가치를 지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가 똑바로 날 수 없듯이 진정한 보수가 발전해야 건전한 진보도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똑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도해 온 보수 주축 세력입니다. 보수 이념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초석입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 낸 세계 유일의 성공신화 국가를 만드는 힘이 바로 보수의 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범보수 세력이 대동단결하여 반드시 보수 정권을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것처럼 피땀 흘려 지키고 발전시켜 온 이 나라를 앞으로도 더욱 번영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도 보수 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새누리당에게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진정한 보수 이념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침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일류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루어 낸 기적적 성취들을 자랑스

럽게 보전하면서 21세기 시대 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맞는 혁신을 중단 없이 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대개혁, 국민의 대통합을 통한 한민족 대도약의 꿈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저 정우택의 소명도 이것입니다.

바로 이 진정한 보수 가치의 재정립,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 이를 위한 범보수 세력의 단결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 이 역사적 사명에 저의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은 앞으로 ‘청년정당’, 새누리당의 정부는 ‘청년정부’가 되도록 청년 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월 국회를 ‘청년국회’로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사회정책적 과제들 중에 저에게 제1번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청년 문제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좌절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한다고 해서 이젠 ‘N포 세대’라는 신조어마저 생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한탄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도전정신이 살아 숨쉬는 나라가 아니라고 좌절합니다. 가진 자들이 힘없는 약자의 권리를 손쉽게 빼앗아 가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부릅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저도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의 가족이 벌인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명문 사학이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학 입학과 학업에 있어서 불의와 불공정은 정말 철저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사 비리와 관련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분야라도 부정 입학이나 학사 비리 문제가 적발될 경우 대학 자

체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제20대 국회 개원 첫날 새누리당은 당론 1호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정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들을 모아 총괄토록 하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 고통이 되고 있는 고용, 주거, 학업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핵심 당면과제인 청년 문제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 정부에 청년부 신설까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엔 채무자부터 되고 마는 ‘빚내는 청춘’이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서 ‘빚나는 청춘’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부채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청년 부채 가속화의 주범인 청년 학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학 및 대학원 입학금과 졸업유예금, 논문심사비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400억 원을 기록한 청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실명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포함해 청년 체불임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나서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교 안에서는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 학교 밖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40만 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100만 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이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으로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어 체불임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빚을 갚기 위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 전체 연령층에 비해 20대의 파산율이 3배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청년 위기를 반영이나 한 듯 대선 후보들의 1호 공약 또한 모두 청년 일자리 공약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법안도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 정치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최고의 애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을 더 이상 속이면 안 됩니다. 이루지도 못할 약속으로 표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세금을 많이 걷어서 청년들에게 나눠 주는 얘기는 누구나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족노조와 기득권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며 일자리 창출 법안에는 줄기차게 반대만 하면서 돈을 나눠 주겠다는 식의 공약을 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야당 출신 시·도지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도지사들도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중점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자리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십만 개, 적게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서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덜어 줘야 합니다. 잡 세어링이라고 불리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제때에 갖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걸음을 뒀을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청년들의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는 청년국회,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국회를 만들기를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청년 문제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존립을 걱정케 할 만큼 재앙적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국가로서 인구소멸 위험도 1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문제만 해도 계획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에 위탁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무이행률은 53%에 불과하고 기업과 학교 사업장의 이행을 또한 저조한 상황입니다. 술선수범해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내 삶의 부담이 아니라 출산이 축복인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경우를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관리 감독과 위반 벌칙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어린이집 설치 규제 부분을 완화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진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은 그렇게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구조적 요인들,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과 여건, 자녀교육비, 나아가 가계의 기본적 경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바탕이 되는 인구 유지와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 1억 명을 지키기에 사활을 건 일본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하고 담

당 장관직을 신설하여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진국들의 저출산 극복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로드맵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월 국회는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제 원내 다수세력이 된 야당이 민생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은 등한시한 채 정권 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리도 적극 동참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오히려 검찰조직에 옥상옥을 만들고 정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합니다.

야당은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국정화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까지 나섰습니다.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교육감들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표창원 의원의 대통령 누드사진 국회전시회 사건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격을 추락시킨 일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그런 말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경기침체와 국정 불안정이 가중되는 속에 야당이 민생과 관련도 없는 정치입법들을 일방적

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그 숨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대한민국의 깊어 가는 격차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은 오랫동안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며 IMF 사태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에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유급휴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 중심으로 운용되는 인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과도 같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이 곧 미래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정책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 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 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

입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재벌의 횡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김영란법, 다른 말로 최순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을 강요할 경우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는 법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제2의 가슴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재벌 일가 재산 부풀리기의 일환인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시키고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약자와 서민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일반 서민들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의 생계형 업종의 보호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행위를 제한하여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은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축산업, 화훼산업 등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의의 불이익을 보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정 작업에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헌법 개정, 즉 개헌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개헌을 막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 속에서, 우리 정치권 속에서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위 인치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헌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누구나 비판하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도 그 정치의 기본 틀인 헌법이 이미 30년이 다 된 낡고 고루한 제도라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새 헌법을 통해 21세기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과 질서를 반영하고 우리의 염원인 통일 한국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설 때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일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하겠다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거나 시간이 없어 못 한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결단만 내린다면 개헌은 두어 달이면 이뤄 낼 수 있습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당시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민투표까지 불과 두 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국회 발의를 기준으로 하면 그해 9월 18일 발의에서 10월 27일 국민투표까지 불과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국회에는 이미 헌법자문위원회 연구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 내에서도 조문화에 접근할 만큼 논의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결단만 있다면 두 달 안에 개헌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애국적 자세로 개헌을 이뤄 나갑시다.

개헌은 이번이 역사적 골든타임입니다. 이 상태로 헌법을 두고 대선을 해 보았자 선출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걸어온 길을 또 걷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모시는 지도자가 지금의 헌법을 고치지 않은 채로 만일 대통령이 될 경우 또다시 불행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합시다.

분권과 협치,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진 헌법을 우리 20대 국회의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대선 전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 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개헌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개혁입니다.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여야 모든 대선주자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의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하기를 요구합니다. 대선 전 개헌에 대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저는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심도 없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있을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건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뚫고 온 대한민국호가 여기서 좌초하느냐 아니면 이 거친 파고를 이겨 내고 순항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선에 나선 분들이 어떤 능력과 품성, 역사적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 의식을 지닌 사람인가를 꼼꼼히 살피고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오로지 권력 쟁취, 정권 장악을 목표로 대권에 나선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후회하고 국가와 대통령 자신도 불행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뽑을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의 위기 속에 나라와 전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 문제에 불분명하고 나아가 불안감을 주는 사람은 결코 현 시점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자신합니다. 안보 문제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여도 야도 이해가 다를 수 없습니다.

둘째, 대선 전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개헌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 어떤 명분이나 핑계를 대든 개헌

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욕 때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을 하지 않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또다시 불행에 빠뜨리겠다는 무책임한 국민 배신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성장전략에 대해 구체적 비전과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대통령선거에서는 성장전략 논쟁이 사라져 버리고 나눠 주기 복지 경쟁만 넘쳐 나고 있습니다. 분배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국가 발전전략, 어떻게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나눠 주기뿐인 인기영합적 공약경쟁을 벌인다면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위대한 성장엔진은 금세 싸늘하게 식어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신하처럼 몰고 다니는 패거리 정치를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소위 대세론 같은 데 올라탔다고 벌써 자만심에 빠져 패권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편을 갈라 내 사람, 내 지지자, 내 편만 챙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치가 우리나라를 망쳤고 그런 정치가 현재의 이 국가적 불행,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누가 우리의 운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정우택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정세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국민의당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 의원(249인)

|       |       |       |       |
|-------|-------|-------|-------|
| 강 병 원 | 강 석 진 | 강 석 호 | 강 창 일 |
| 강 효 상 | 강 훈 식 | 경 대 수 | 고 용 진 |
| 곽 대 훈 | 곽 상 도 | 권 미 혁 | 권 석 창 |
| 권 성 동 | 권 은 희 | 권 칠 승 | 금 태 섭 |
| 기 동 민 | 김 경 진 | 김 경 협 | 김 관 영 |
| 김 광 립 | 김 규 환 | 김 기 선 | 김 도 읍 |
| 김 동 철 | 김 명 연 | 김 민 기 | 김 병 관 |
| 김 병 기 | 김 병 옥 | 김 부 겸 | 김 삼 화 |
| 김 상 훈 | 김 상 희 | 김 석 기 | 김 선 동 |
| 김 성 수 | 김 성 원 | 김 성 찬 | 김 성 태 |
| 金 成 泰 | 김 세 연 | 김 수 민 | 김 승 희 |
| 김 영 우 | 김 영 진 | 김 영 춘 | 김 영 호 |
| 김 재 경 | 김 정 우 | 김 정 재 | 김 정 훈 |
| 김 종 대 | 김 종 민 | 김 종 석 | 김 종 인 |
| 김 종 훈 | 김 중 로 | 김 진 태 | 김 철 민 |
| 김 태 년 | 김 태 흠 | 김 한 정 | 김 한 표 |
| 김 해 영 | 김 현 권 | 김 현 아 | 남 인 순 |
| 노 웅 래 | 도 중 환 | 문 미 옥 | 문 진 국 |
| 문 회 상 | 민 경 옥 | 민 병 두 | 민 홍 철 |
| 박 경 미 | 박 광 온 | 박 남 춘 | 박 대 출 |
| 박 덕 흠 | 박 맹 우 | 박 명 재 | 박 범 계 |
| 박 선 숙 | 박 순 자 | 박 영 선 | 박 완 수 |
| 박 완 주 | 박 용 진 | 박 인 숙 | 박 재 호 |
| 박 정   | 박 주 민 | 박 주 선 | 박 주 현 |
| 박 준 영 | 박 지 원 | 박 찬 대 | 박 찬 우 |
| 박 홍 근 | 백 재 현 | 백 해 련 | 변 재 일 |
| 서 영 교 | 서 형 수 | 설 훈   | 성 일 종 |
| 소 병 훈 | 손 금 주 | 손 해 원 | 송 기 석 |
| 송 기 현 | 송 석 준 | 송 영 길 | 송 옥 주 |
| 송 회 경 | 신 동 근 | 신 보 라 | 신 상 진 |
| 신 용 현 | 신 창 현 | 심 재 권 | 심 재 철 |
| 안 규 백 | 안 민 석 | 안 상 수 | 안 철 수 |
| 안 호 영 | 양 승 조 | 어 기 구 | 엄 용 수 |
| 여 상 규 | 염 동 열 | 오 세 정 | 오 영 훈 |
| 오 제 세 | 우 원 식 | 원 유 철 | 원 해 영 |
| 위 성 곤 | 유 기 준 | 유 동 수 | 유 민 봉 |
| 유 성 엽 | 유 재 중 | 윤 관 석 | 윤 상 현 |
| 윤 소 하 | 윤 영 석 | 윤 영 일 | 윤 재 옥 |
| 윤 종 오 | 윤 종 필 | 윤 한 홍 | 윤 후 덕 |

|        |       |       |       |
|--------|-------|-------|-------|
| 이 개 호  | 이 군 현 | 이 동 섭 | 이 만 희 |
| 이 명 수  | 이 상 돈 | 이 석 현 | 이 양 수 |
| 이 언 주  | 이 완 영 | 이 용 득 | 이 용 주 |
| 이 우 현  | 이 원 옥 | 이 은 권 | 이 인 영 |
| 이 재 정  | 이 정 미 | 이 정 현 | 이 종 결 |
| 이 중 구  | 이 중 명 | 이 중 배 | 이 주 영 |
| 이 진 복  | 이 찬 열 | 이 채 익 | 이 철 우 |
| 이 철 희  | 이 춘 석 | 이 학 영 | 이 학 재 |
| 이 현 승  | 이 현 재 | 이 훈   | 인 재 근 |
| 임 이 자  | 임 종 성 | 장 병 완 | 장 정 숙 |
| 장 제 원  | 전 재 수 | 전 해 철 | 전 현 회 |
| 전 회 경  | 정 갑 윤 | 정 병 국 | 정 성 호 |
| 정 세 균  | 정 양 석 | 정 우 택 | 정 윤 천 |
| 정 유 섭  | 정 인 화 | 정 재 호 | 정 진 석 |
| 정 춘 숙  | 정 태 옥 | 제 윤 경 | 조 경 태 |
| 조 배 숙  | 조 원 진 | 조 응 천 | 조 정 식 |
| 조 훈 현  | 주 광 덕 | 주 승 용 | 주 호 영 |
| 지 상 옥  | 진 영   | 채 이 배 | 천 정 배 |
| 최경환(새) | 최 도 자 | 최 명 길 | 최 연 혜 |
| 최 윤 열  | 최 인 호 | 추 경 호 | 추 미 애 |
| 추 혜 선  | 표 창 원 | 하 태 경 | 한 정 애 |
| 함 진 규  | 홍 문 종 | 홍 영 표 | 홍 의 락 |
| 홍 익 표  | 홍 일 표 | 황 영 철 | 황 주 홍 |
| 황 희    |       |       |       |

○개회 시 재석 의원(145인)

|       |       |       |       |
|-------|-------|-------|-------|
| 강 병 원 | 강 석 진 | 강 석 호 | 강 효 상 |
| 고 용 진 | 곽 대 훈 | 곽 상 도 | 권 성 동 |
| 권 칠 승 | 기 동 민 | 김 광 립 | 김 규 환 |
| 김 도 읍 | 김 민 기 | 김 병 관 | 김 병 기 |
| 김 부 겸 | 김 상 훈 | 김 선 동 | 김 성 수 |
| 김 성 찬 | 김 성 태 | 金 成 泰 | 김 수 민 |
| 김 승 희 | 김 영 우 | 김 영 호 | 김 재 경 |
| 김 정 우 | 김 정 재 | 김 종 대 | 김 종 석 |
| 김 종 훈 | 김 중 로 | 김 철 민 | 김 한 표 |
| 김 해 영 | 김 현 아 | 노 웅 래 | 문 미 옥 |
| 문 진 국 | 민 경 옥 | 민 홍 철 | 박 경 미 |
| 박 남 춘 | 박 대 출 | 박 명 재 | 박 범 계 |
| 박 선 숙 | 박 완 수 | 박 완 주 | 박 용 진 |
| 박 인 숙 | 박 재 호 | 박 정   | 박 주 민 |
| 박 준 영 | 박 찬 우 | 박 홍 근 | 백 재 현 |
| 백 해 련 | 서 형 수 | 소 병 훈 | 송 석 준 |
| 송 옥 주 | 송 회 경 | 신 동 근 | 신 보 라 |
| 신 상 진 | 신 창 현 | 심 재 철 | 안 호 영 |
| 양 승 조 | 엄 용 수 | 여 상 규 | 염 동 열 |
| 오 세 정 | 오 영 훈 | 원 유 철 | 유 기 준 |

|       |        |       |       |
|-------|--------|-------|-------|
| 유 동 수 | 유 성 엽  | 유 재 중 | 윤 관 석 |
| 윤 영 석 | 윤 재 옥  | 윤 종 오 | 윤 종 필 |
| 윤 후 덕 | 이 군 현  | 이 동 섭 | 이 만 희 |
| 이 양 수 | 이 용 득  | 이 용 주 | 이 우 현 |
| 이 원 옥 | 이 은 권  | 이 재 정 | 이 정 미 |
| 이 종 구 | 이 종 명  | 이 종 배 | 이 진 복 |
| 이 찬 열 | 이 채 익  | 이 철 희 | 이 춘 석 |
| 이 학 영 | 이 현 재  | 이 훈   | 인 재 근 |
| 임 이 자 | 임 종 성  | 장 병 완 | 장 정 숙 |
| 장 제 원 | 전 희 경  | 정 갑 윤 | 정 세 균 |
| 정 양 석 | 정 우 택  | 정 유 섭 | 정 진 석 |
| 정 춘 숙 | 정 태 옥  | 조 정 식 | 조 훈 현 |
| 주 광 덕 | 주 호 영  | 지 상 옥 | 진 영   |
| 천 정 배 | 최경환(새) | 최 도 자 | 최 운 열 |
| 추 경 호 | 추 미 애  | 표 창 원 | 한 정 애 |
| 함 진 규 | 홍 익 표  | 홍 일 표 | 황 영 철 |
| 황 희   |        |       |       |

## ○산회 시 재석 의원(195인)

|       |       |       |       |
|-------|-------|-------|-------|
| 강 석 진 | 강 창 일 | 강 효 상 | 강 훈 식 |
| 경 대 수 | 곽 대 훈 | 곽 상 도 | 권 미 혁 |
| 권 석 창 | 권 은 희 | 권 칠 승 | 기 동 민 |
| 김 경 진 | 김 관 영 | 김 광 립 | 김 규 환 |
| 김 기 선 | 김 도 읍 | 김 명 연 | 김 민 기 |
| 김 병 관 | 김 병 기 | 김 병 옥 | 김 부 겹 |
| 김 삼 화 | 김 상 훈 | 김 상 희 | 김 석 기 |
| 김 선 동 | 김 성 수 | 김 성 원 | 김 성 찬 |
| 金 成 泰 | 김 세 연 | 김 수 민 | 김 승 희 |
| 김 영 호 | 김 정 우 | 김 정 재 | 김 정 훈 |
| 김 종 대 | 김 종 민 | 김 종 석 | 김 종 인 |
| 김 종 훈 | 김 진 태 | 김 태 년 | 김 태 흠 |
| 김 한 정 | 김 한 표 | 김 해 영 | 김 현 아 |
| 도 종 환 | 문 진 국 | 문 희 상 | 민 경 옥 |
| 민 흥 철 | 박 광 온 | 박 남 춘 | 박 대 출 |
| 박 덕 흠 | 박 범 계 | 박 선 숙 | 박 순 자 |
| 박 완 수 | 박 완 주 | 박 용 진 | 박 인 숙 |
| 박 재 호 | 박 정   | 박 주 현 | 박 준 영 |
| 박 지 원 | 박 찬 대 | 박 찬 우 | 박 홍 근 |
| 백 재 현 | 백 해 련 | 변 재 일 | 서 영 교 |
| 서 형 수 | 설 훈   | 성 일 중 | 소 병 훈 |
| 손 금 주 | 손 혜 원 | 송 기 현 | 송 석 준 |
| 송 영 길 | 송 옥 주 | 송 희 경 | 신 동 근 |
| 신 보 라 | 신 상 진 | 신 용 현 | 신 창 현 |
| 심 재 철 | 안 규 백 | 안 상 수 | 안 호 영 |
| 양 승 조 | 어 기 구 | 엄 용 수 | 염 동 열 |
| 오 세 정 | 오 영 훈 | 오 제 세 | 원 유 철 |

|       |        |       |       |
|-------|--------|-------|-------|
| 유 기 준 | 유 동 수  | 유 민 봉 | 윤 관 석 |
| 윤 상 현 | 윤 소 하  | 윤 영 석 | 윤 영 일 |
| 윤 재 옥 | 윤 종 오  | 윤 종 필 | 윤 한 홍 |
| 윤 후 덕 | 이 군 현  | 이 동 섭 | 이 만 희 |
| 이 명 수 | 이 상 돈  | 이 석 현 | 이 양 수 |
| 이 언 주 | 이 완 영  | 이 용 주 | 이 우 현 |
| 이 원 옥 | 이 재 정  | 이 정 미 | 이 정 현 |
| 이 종 결 | 이 종 명  | 이 종 배 | 이 주 영 |
| 이 찬 열 | 이 채 익  | 이 철 우 | 이 철 희 |
| 이 춘 석 | 이 헌 승  | 이 현 재 | 이 훈   |
| 임 이 자 | 임 종 성  | 장 병 완 | 장 정 숙 |
| 장 제 원 | 전 현 희  | 전 희 경 | 정 갑 윤 |
| 정 병 국 | 정 성 호  | 정 세 균 | 정 양 석 |
| 정 우 택 | 정 유 섭  | 정 인 화 | 정 재 호 |
| 정 진 석 | 정 태 옥  | 조 경 태 | 조 배 숙 |
| 조 원 진 | 조 응 천  | 조 훈 현 | 주 광 덕 |
| 주 승 용 | 주 호 영  | 지 상 옥 | 진 영   |
| 채 이 배 | 최경환(새) | 최 도 자 | 최 명 길 |
| 최 연 혜 | 최 운 열  | 최 인 호 | 추 경 호 |
| 추 미 애 | 추 혜 선  | 표 창 원 | 하 태 경 |
| 한 정 애 | 함 진 규  | 홍 문 중 | 홍 영 표 |
| 홍 의 락 | 황 영 철  | 황 희   |       |

## ○출장 의원(1인)

김 학 용

## ○청가 의원(23인)

|       |        |       |       |
|-------|--------|-------|-------|
| 김 경 수 | 김 광 수  | 김 종 태 | 김 종 회 |
| 김 현 미 | 나 경 원  | 노 회 찬 | 박 병 석 |
| 박 성 중 | 백 승 주  | 심 상 정 | 유 승 희 |
| 유 은 혜 | 유 의 동  | 이 용 호 | 이 철 규 |
| 이 혜 훈 | 전 혜 숙  | 정 동 영 | 조 승 래 |
| 진 선 미 | 최경환(국) | 홍 철 호 |       |

## ○국회사무처

|         |   |   |   |
|---------|---|---|---|
| 사 무 총 장 | 우 | 윤 | 근 |
| 의 사 국 장 | 권 | 영 | 진 |

##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               |   |   |   |
|---------------|---|---|---|
| 국 무 총 리       | 황 | 교 | 안 |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 유 | 일 | 호 |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 이 | 준 | 식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 | 양 | 희 |
| 외 교 부 장 관     | 윤 | 병 | 세 |
| 통 일 부 장 관     | 홍 | 용 | 표 |
| 행정자치부장관       | 홍 | 윤 | 식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 | 재 | 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 | 형 | 환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정 | 진 | 엽 |

|               |       |
|---------------|-------|
| 환 경 부 장 관     | 조 경 규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이 기 권 |
| 여 성 가 족 부 장 관 | 강 은 희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강 호 인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 김 영 석 |
| 국 민 안 전 처 장 관 | 박 인 용 |

○출석 정부위원

|                                |       |
|--------------------------------|-------|
| 법 무 부 차 관<br>( 장 관 직 무 대 리 )   | 이 창 재 |
| 국 방 부 차 관                      | 황 인 무 |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br>( 장 관 직 무 대 행 ) | 송 수 근 |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염동열 · 황영철 · 金成泰 · 김진태 ·  
권성동 · 조훈현 · 김명연 · 이은재 · 김성태 ·  
문진국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 이종걸 · 김종민 · 정재호 · 서영교 ·  
강창일 · 민병두 · 김경진 · 박용진 · 노웅래 ·  
유성엽 · 심재권 의원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 강창일 · 정재호 · 이종걸 · 박남춘 ·  
소병훈 · 윤관석 · 김철민 · 인재근 · 박정 ·  
최도자 의원 발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이종걸 · 정재호 · 서영교 · 강창일 ·  
민병두 · 김경진 · 안규백 · 박용진 · 노웅래 ·  
유성엽 · 김영춘 의원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송기석 · 김경진 · 김관영 · 김삼화 ·  
박주선 · 신용현 · 오세정 · 유성엽 · 이동섭 ·  
이용주 · 윤영일 · 정인화 · 장병완 · 최경환(국) ·  
도종환 · 김정재 · 이종배 · 심상정 의원 발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박주민 · 김철민 · 소병훈 · 김현권 ·  
윤후덕 · 이원욱 · 김영진 · 유동수 · 박찬대 ·

이개호 · 위성곤 · 김병기 · 신창현 · 김한정 ·  
송기현 · 박정 · 황희 · 기동민 · 백재현 ·  
유승희 · 임종성 · 노웅래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장제원 · 박성중 · 여상규 · 김현아 ·  
김재경 · 김영우 · 권성동 · 김세연 · 김학용 ·  
이종구 · 유승민 · 김성태 · 이은재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 장제원 · 박성중 · 여상규 · 김현아 ·  
김재경 · 김영우 · 권성동 · 황영철 · 김세연 ·  
김학용 · 이종구 · 유승민 · 이은재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윤영일 · 황주홍 · 신용현 · 홍철호 ·  
정인화 · 위성곤 · 정재호 · 김삼화 · 주승용 ·  
안규백 의원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정태옥 · 김도읍 · 이현재 · 유기준 ·  
지상욱 · 이명수 · 박덕흠 · 경대수 · 박명재 ·  
조원진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 하태경 · 김정훈 · 김세연 · 조경태 ·  
장제원 · 최인호 · 한정애 · 홍영표 · 김현아 ·  
민홍철 의원 발의)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장제원 · 박성중 · 여상규 · 김현아 ·  
김재경 · 김영우 · 권성동 · 황영철 · 김세연 ·  
김학용 · 이종구 · 유승민 · 김성태 · 이은재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곽상도 · 이현재 · 김성원 · 권석창 ·  
박덕흠 · 김정재 · 김석기 · 강석호 · 박명재 ·  
정태옥 · 함진규 · 염동열 · 윤후덕 · 홍문종 ·  
이종명 · 김영우 · 이완영 · 조원진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홍익표 · 박정 · 서영교 · 김정우 ·  
이재정 · 박홍근 · 인재근 · 유은혜 · 안규백 ·  
권칠승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홍익표 · 박정 · 서영교 · 이재정 · 박홍근 · 인재근 · 유은혜 · 안규백 · 권철승 · 김현권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최도자 · 황주홍 · 김종대 · 전해숙 · 권석창 · 서영교 · 신용현 · 김정우 · 신경민 · 박주현 · 이용주 · 김삼화 의원 발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김병관 · 이원욱 · 김영진 · 황희 · 유동수 · 최명길 · 박광온 · 최인호 · 박정 · 김태년 · 문미옥 · 설훈 · 김정우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이학영 · 박찬대 · 황희 · 박남춘 · 전해철 · 최인호 · 김영주 · 남인순 · 정인화 · 윤영일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정태옥 · 김도읍 · 이현재 · 유기준 · 이명수 · 김용태 · 박덕흠 · 박명재 · 이현승 · 추경호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함진규 · 이현승 · 박덕흠 · 이우현 · 성일종 · 강석진 · 김승희 · 최연혜 · 김종석 · 이명수 의원 발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김현권 · 안호영 · 김철민 · 이개호 · 안상수 · 정인화 · 위성곤 · 황주홍 · 인재근 · 홍문표 · 이용득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함진규 · 이현승 · 박덕흠 · 이우현 · 성일종 · 강석진 · 김승희 · 최연혜 · 김종석 · 이명수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최운열 · 박용진 · 어기구 · 박재호 · 윤후덕 · 김철민 · 소병훈 · 민병두 · 정성호 · 전현희 · 송옥주 · 양승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7. 2. 2. 김정우 · 박찬대 · 이철희 · 문미옥 · 강창일 · 위성곤 · 안민석 · 김병기 · 송옥주 · 최인호 · 박광온 · 최운열 · 유동수 · 권미혁 · 박남춘 · 김영호 · 조승래 · 이춘석 · 김상희 · 유은혜 · 신창현 · 표창원 · 전현희 · 이재정 · 설훈 · 윤후덕 · 안호영 · 김현권 · 김철민 · 채윤경 · 고용진 · 김병욱 · 강병원 · 박경미 · 김종민 · 우원식 · 전해철 · 정재호 · 소병훈 · 백혜련 · 김영진 · 김병관 · 박완주 · 임종성 · 기동민 · 홍영표 · 김현미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송석준 · 최도자 · 정성호 · 이태규 · 엄용수 · 안상수 · 김정훈 · 이현승 · 유기준 · 경대수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박용진 · 김해영 · 박찬대 · 이종걸 · 이철희 · 김관영 · 김영주 · 민병두 · 채윤경 · 최운열 의원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최명길 · 김영진 · 김경협 · 윤호중 · 변재일 · 최인호 · 신경민 · 이훈 · 김영주 · 김두관 · 박용진 · 고용진 · 김병관 · 안호영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민병두 · 김상희 · 이찬열 · 안규백 · 박정 · 박주민 · 박용진 · 고용진 · 이종걸 · 어기구 의원 발의)

이상 28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 건**

(2017. 2. 3. 의장 제의)

2월 4일(1일간)

○서면질문서 제출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문서**

(2017. 2. 2. 위성곤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16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성과 및 업무계획 보고**

(2017. 2. 2. 중소기업청장 제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송부하겠음